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합주곡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보도지침」을 실은 1986년 9월호 「말」지 특집호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재야 언론운동 단체인 민주 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는 1986년 9월 6일 기관지인 『말』지 특집호에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을 실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국가권력과 그의 협력자인 제도언론이 어떻게 정보를 왜곡·조작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이른바 「보도지침 사례집」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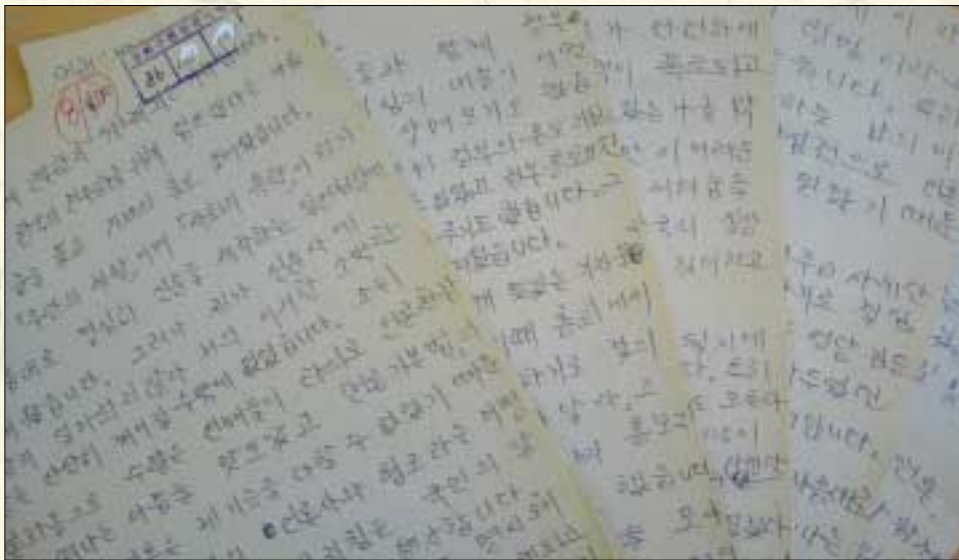
이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월 9일과 15일에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 실행위원 신흥범,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등이 연행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1월 27일 이들을 외교상의 기밀 누설, 국가 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거창한 죄목으로 기소하였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은 늘 써먹는 내용이니 그렇다 치고, 「보도지침」 폭로가 웬 외교상 기밀누설죄고 국가모독죄? 소가 웃을 일이었다. 어쨌든

그땐 그런 세상이었다. 그들은 1987년 6월 3일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언협의 실행위원 박우정이 그해 3월 6일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구속되고, 3월 9일 정상모 사무국장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보도지침」은 과연 무엇인가? 「보도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다.

그 예를 들자면 보도지침은 1986년 3월 17일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 중 ‘개헌은 이룰수록 좋다’는 것을 삭제하라고 하는가 하면, 1986년 4월 28일 미하원 아시아태평양지역소위 위원장인 솔라즈 의원의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내용 중 ‘한국이 불행을 회피하려면 민주화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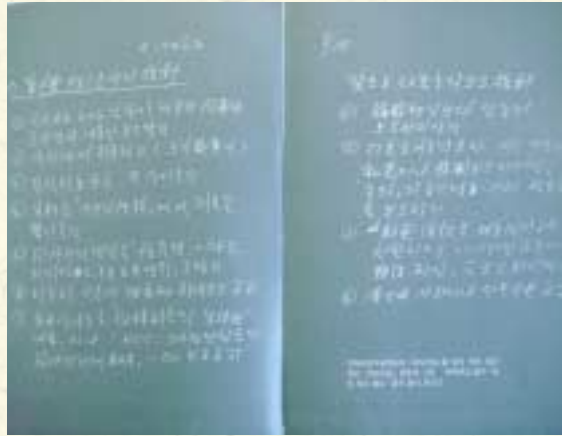
「보도지침」을 폭로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의 양심선언문



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1986년 5월 1일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에서의 인권탄압 사례를 보도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1986년 7월 12일에는 부천 성고문 사건 관계는 발표 때까지 보도를 일절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폭력성과 기만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뿐 아니라 1985년 11월 18일에는 치안본부가 ‘최근 학생시위, 적군파식 모방’이라는 발표문을 크게 다루어줄 것과 특히 ‘적군파식 수법’이라는 제목을 붙이라고 요구하는 등 용공으로 조작하는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빈틈없는 언론통제와 제도언론의 충실한 이행과정 속에서 어이없는 대중조작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1986년 8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홍보지침 필사본을 전달했던 한국일보 편집부 김주언 기자는 ‘양심선언문’(사진 참조)을 통해 “‘무관의 제왕’이며 ‘사회의 목탁’이 되기 위해 신문사 기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언론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특히 정부의 언론사와 협조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홍보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이를 알고도 방치할 수 없어서 세상에 알리기로”했다고 밝혔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청춘의 일부를 감옥에 반납했지만, 알 권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에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가 되어 국민주 <한겨레신문>의 탄생을 앞당기게 했다.

「보도지침」 사건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용산 철거민참사와 관련한 무슨 ‘홍보지침’이라는 흉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반대여론에는 재갈



「보도지침」 내용 일부

을, 여론호도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명 높은 5공의 보도지침이 뒤늦게 부활이라도 했던 말인가?

마음이 어지럽다. 권부를 차고앉은 자들은 알팍한 잔피나 부려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지 말고 스스로가 국민들의 공복(公僕)임을 이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혀에는 쓰되 몸에는 좋은 보약으로 알고 한번 진지하게 새겨보길 권하고 싶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보복이나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섭니다. 책임자는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법에 의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평화신문> 1996년 신년대담)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